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 경제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김 용 복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요약 》

한국경제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 규모는 축소되고,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는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는 1) 우선 경제위기의 도래를 막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문제와 가계, 기업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을 기해야 한다. 2)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노동력 확충, 다양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R&D의 대폭 확대, 규제 합리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활동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길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포용의 방향으로, 환경 정책을 국제적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기본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관철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3년 11월 한 일본 경제지에서는 ‘한국경제는 끝났다’는 제목 아래 코리아 피크론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22년 골드만 삭스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가 2075년에는 필리핀보다 뒤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들은 경제성장률을 위주로 하여 경고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피케티 비율(자본/소득)이 9를 넘을 정도로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하여 한국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자살, 무차별 폭행, 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빈곤률 1위, 합계출산률 꼴등으로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이대로 가면 미래의 한국경제 모습은 어떠한가? 경제 규모는 축소되어 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활력 넘치고, 편안한 삶을 구가하는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한국경제는 충격에 취약하다. 번번이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지금도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의 우려가 불식되고 있지 못하다. 혹시라도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 이력 효과로 인해 앞에서 우려한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제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는 1)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시급히 해소하여,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질을 갖추는 것 2) 떨어지는 추세적 성장률 저하의 흐름을 멈추고 그 방향을 돌리는 것 3)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기후 위기의 위협에 벗어나고, 경제적 약자들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하나씩 제시해 보겠다.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부터 풀어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 동안 부동산 PF는 부실화 우려를 샀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브리지 론 단계에서 문제가 된 187개 사업장을 관리 대상으로 하여 2023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뤄 본 PF로 넘어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2023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지난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는 증권사, 신용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는 달리 은행권의 관련 정도가 낮고, 대형 건설사가 염려되는 정도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 부동산 PF가 132조에 달하고, 시공능력 8위 업체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으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방법이다. 올해부터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터이니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실을 도려내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부동산 PF 부실을 떠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가의 문제가 있다. 여전히 고금리인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등으로 우리는 쉽게 인하하기가 어렵고, 부동산 부양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버틴다 해도 시간이 흐를 경우 이자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부동산 개발을 성공시키지 못할 수 있다. 무거워진 부채 부담은 더 큰 위기 가능성을 잉태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제2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로 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자산의 공경매가 이뤄지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업체는 낮은 원가로 부동산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시장 기능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두 해결 방안 모두 부담이 있지만,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는 소위 '질서있는 정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는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천수답처럼 국제금리의 인하나 부동산 가격의 회복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좀 더 안전한 경제체질의 형성을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가계 및 기업 부채의 급증을 막아야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많은 한국경제가 고금리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의 비율

은 IMF의 Global Debt Database에 따르면 2018년 244.1%에서 2022년 281.7%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94.3%에서 108.1%로 크게 증가하였다. 측정이 가능한 국가 26개 중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이러한 증가의 배후에는 저금리로 인한 집값 폭등이 있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영끌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에 나선 결과이다.

부채의 비중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위기가 발생하느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면 위기로 비화할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한국 가계의 경우 자산 보유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부채 중 변동금리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에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금융위기로의 이전 가능성을 낮추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가서 걱정이다.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은행을 직접 압박하는 식으로 금리 인하를 끌어냈고, 또한 특례보증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시행,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감세, DSR 규제의 예외 확대 등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하향 추세에 있던 부동산 가격이 반전되었고,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

가계 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변을 막는 방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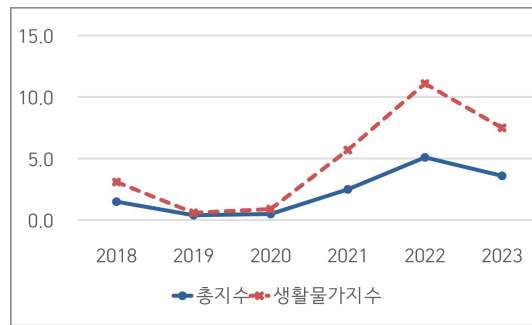
로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금리 → 부동산 PF 부실 → 금융과 거시경제의 동요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를 억제하기 위한 DSR, DTI 등의 기능 회복, 전세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에 의존하는 부동산 부양의 억제, 한국은행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통화정책의 강화 등 안정성을 높일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부채의 빠른 증가는 코로나 시기와 그 이후 고금리·고물가 시기 경영 부진으로 인한 부족 자금을 부채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과 코로나 피해 업종의 부채 증가가 크고 재무건전성도 악화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자부담/영업이익)이 1을 하회하여 부실염려가 있는 기업의 비중은 2023년 6월말 현재 44.8%에 이르며, 특히 중소기업은 58.9%이다. 기업부채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만기 연장과 이자 후불로 문제 해결보다는 미루기에 가깝다. 이는 위기를 뒤로 미루는 데 불과하다. 제2 금융권에 부동산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고, 부실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기관별 대손충당금 제고나 부실대응기금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물가를 잡아 민생의 고통을 줄여야

여기저기서 민생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가가 올라 못 살겠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물가 중에서도 음식, 식료품, 의복 등 일반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물품의 가격인 소위 ‘생활물가’의 상승률이 높았던 것도 삶을 고단하게 했을 것이다.

〈그림 1〉 소비자물가 지수 등락율



자료: 통계청

올해도 한미간 금리격차, 세계 원자재 시장 등의 영향으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안정에 고삐를 당겨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2022년 이후 높은 물가 상승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정부도 손을 놓지는 않았다. ‘빵 사무관’, ‘과자 사무관’ 등의 말이 나올 만큼 정부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자주 활용된 개별가격 관리방식, 즉 동종기업에 대한 직접 압박 방식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했다.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가격상승을 억누를 뿐으로 압박이 사라지면 다시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기 요금의 인상을 연기하거나 소폭에 그친 결과 한전의 대폭 적자가 심해져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을 봐도 그렇다. 이러한 정책은 물가상승을 시간적으로 미루는 응급처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전체적인 물가는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책임이지만 정부 역시 물가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을 활용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어민 소득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었지만, 수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민생을 위한 재정기능의 회복과 안정

무엇보다 적자 재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현 정부는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2년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적자였고, 올해는 60조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대폭의 적자는 무엇보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서 비롯되었지만,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도 가세하였다.

정부는 감세하면서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식으로 건전재정, 사실상 긴축재정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시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감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가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재정지출 증가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그 논리에 수궁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방침에 따라 정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정부에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 및 시장 실패의 보완, 경제성장 및 경제안정, 분배 개선 등의 역할이 있으며, 근래에는 급속한 기술 변화로 출현할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침체가 뚜렷하고, 민생의 어려움이 심할 때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할 임무가 막중할 때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요구된다. 정부가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활용하여 이들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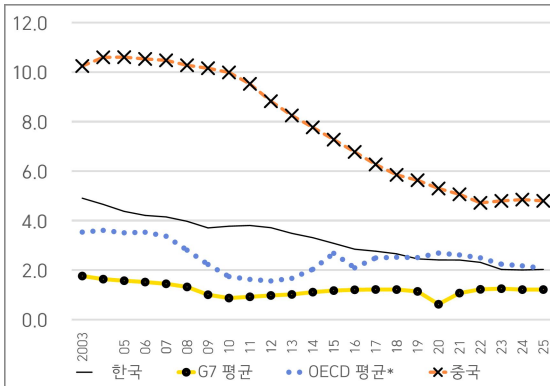
재정건전성을 내세운 긴축재정의 영향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경찰, 유치원 교사들이 제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나, 지역의 예산이 감축되어 지역 돌봄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에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기도 하다.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로 책정되므로 지자체들은 2023년에 11조 내외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의 감소와 맞물려 그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소위 '부자 감세'의 영향이 시민들의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올해도 내수, 투자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뎠다. 세수가 충분히 걸릴지 의문이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해 경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등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국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멈추게 해야

과도한 성장은 경제를 과열시키고 왜곡시키지만, 고용, 복지 등 경제 및 사회 안정에는 적절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가의 경제성장 기본 능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한국에서 2003년 4.9%, 2013년 3.5%, 2023년 2.0%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아직 G7 국가들 보다는 높으나, 그 이전 제법 차이를 보였던 OECD 국가(G7 국가를 제외한 30개국의 평균)보다도 하회하게 되었다. 한국

은행 경제연구원은 2031년부터 0%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림 2>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에서 OECD 자료 인용한 것을 활용
 *: OECD 평균은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G7을 제외한 30개국의 평균을 의미.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를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눠 봤을 때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에는 아무래도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 증가율 정체 및 감소, 자본의 수익성 저하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투입, 자본투입의 증가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력효과(hysteresis)를 막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2012년 이후 2023년까지 1년을 제외하고는 GDP갭을 보이고 있다.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성장은 경제 활력을 위축시켜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민간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노동투입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높여야 하며, 이주 노동자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저임금으로만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여성, 고령자 노동력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도 인권 유린, 차별의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생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그 해결책을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양육비의 지급 등이 문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 만큼, 우리 사회가 왜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교육시킬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획기적인 경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결혼 안 하고, 자식을 키우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본투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해외보다 국내에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쏠리는 경향을 막을 수 있고, 외국 기업들을 활발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출해 있는 외국인 기업들의 고충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것은 해외시장의 유지 문제이다. 최근 ‘가치 동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해외

시장의 축소는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도 위축시키게 마련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12월 미국에 뒤처지긴 했지만, 2023년 19.7%로 여전히 한국의 제1 수출시장이다.(미국은 18.3%). 또한 전경련(현재 한국경제인협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안전에 취약한 133개 품목 중 중국산 비중이 95.4%에 이르고 있다. '가치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선불리 탈중국을 주장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것이 된다. 이보다는 중국의 기술수준 상향과 내수 위주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기존 중간재 중심의 수출을 뛰어넘는 새로운 분업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남북한 경제협력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게 되면 잠재성장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진영 대결 구도의 청산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 신기술, 신산업을 개발하고, 2) 규제를 정비하고 3) 스타트업, 중소벤처 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현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AI,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신기술 R&D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반도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 분야에 자원이 몰리게 되면 산업의 융합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절름발이가 될 수 있으며, 핀란드 노키아나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보듯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둘째, 규제가 신산업과 신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지만, 규제 자체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없어야 할 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인권, 기존 산업과의 마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컨대 인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출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날 규제가 적절한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이 가져올 사회, 환경, 인권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달라야 할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규제, 사후 규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회 입법은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 의회를 통한 '우회 입법'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도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과 국민들의 행복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2만 달러대까지는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관계 없다고 한다.

우리는 선진국이 된 만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만큼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장정책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시간, 임금, 노동3

권 등에서의 기존 성과를 거꾸로 되돌리면
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노동자의 안전, 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도 산재사고의 80% 가량
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계속 유예하려고 하
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를 무력화하기 위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계도기간을 재
차 연장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
혁'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소비자물
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설정
하였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거부
권을 행사하고,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하
청노조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
기도 하였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책임을 노조의
경직성에 돌리고, 이중구조의 탈피를 명분으
로 임금체계를 현행 연공제(호봉제)에서 직
무성과제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부작용이 있으며, 노동자들의 다수 의견에도
반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불공정한 원·하청관계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에 있다. 그럼에
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을 내
세우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올해도 경기 회복 정도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노동정
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악화, 내수 시장
의 위축, 사회적 분열로 귀결될 것이며, 기
업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체

질에서 탈피해 신산업 신기술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그간의 많은 비정규직 전
환 대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수가 2003년 462.2만 명에서
2023년 815.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도 32.6%에서 37.0%로 증가하였
고, 차별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의 증가 등 기술변화의 영향
으로 비정규직 축소가 능사는 아니다. 하지
만 비정규직 고용을 기업 비용 저하의 관점
에서 접근하거나, 정규직 정리해고를 용이하
게 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
직에 맡기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루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산업 안전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색

성장의 그늘이 깊어질수록 복지의 필요성
이 커진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방
향을 반대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복지지출 비용은 늘려잡고 있으나 고령화
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사회통합
돌봄 시범사업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공병원의 설치에도 소극적

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에 나섰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진행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위험이 커진다. 정부가 사회보장의 제공이라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소규모,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쉽게 민영화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돌봄 등 서비스를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활발한 경제,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해가자는 기본서비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서비스는 노동 유인, 소득 불평등의 완화,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의 효과가 있고, 기본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 공유된 욕구와 집단적 책임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기본서비스와 더불어 '괜찮은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화 과제의 중요성은 많이 언급되어 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등으로 수출, 공급망 참여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계속되어 왔다.

현 정부는 탄소중립화 과제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

서 후퇴하여 2026년까지의 달성 목표를 NDC(국가별 감축 목표)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RE100의 여건을 마련하거나, 24/7 CFE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CF100을 국제 표준으로 삼겠다고 한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문제도 있다. 자연재해, 전쟁으로 인한 위험, 핵폐기물 보관의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원자력에 의존하여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나온 무리수가 아닌가 한다.

국제적 환경 요구에 부응하고, 또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뤄가야 할 것이다. 청정수소 등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국면에서 준비가 늦어지게 되면 한국의 경제 산업 경쟁력 역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로 크게 1) 경제위기로의 가능성 차단과 경제 안정화 2)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의 전환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당면 과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식의 전환에 있다고 본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 민

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나 경제성장을 노동이나 환경보다, 가치동맹을 경제보다도 우선하는 인식이 있다면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바탕하여 정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IES**

| 약력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다.